칼럼
원자력안전문화

새해를 맞이하며

이 승 구
과학기술처 안전심사관

송구영신(送舊迎新)은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것이다. 매년 연말이 되면 한해를 마감하고 무언가 소망스러운 새해를 맞이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마음이 들뜨고, 새해를 맞이하면 묵은 때를 털어버리고 난 홀가분한 기분과 새해의 설계로 희망차다.

특히 지난해와 같이 우리 사회가 특별히 다사다난하였던 한해를 보낸 경우에는 새해에 대해 보다 많은 바램을 갖게 된다.

지난해 우리 생활주변에서 많은 인명을 앗아간 연이은 대형사고는,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잠재되어 있던 목표지향적 사고방식과 '빨리빨리' 그리고 '적당히' 문화의 허구를 다시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고, 비자금 문제와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등 수치스런 정치문화의 노출은 그 시대를 살아왔던 우리 모두에게 일종의 자괴감(自愧感)마저 느끼게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맞이하는 병자(丙子)년 새해는, 우리 사회가 암울한 회색터널에서 눈부신 은빛세계로 빠져나오는 입구에 서있는 것 같은 일신(一新)의 소망이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한 것 같다.

이러한 일신의 과정으로서의 개혁은 그 자체가 갖는 충격으로 인하여 추진력을 갖추어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과거 장기간 자리잡아 온 잘못된 관행들을 변화시켜 제자리에 안착시키기에는 아직 시간적 여유를 필요로 하고 있는 것 같다.

원자력계도 예외는 아니어서 지난해 발생한 몇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은 우리가 그간 추진하여 왔던 원자력사업에 근본적인 개선점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해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이후에 불거져나온 원자력발전소 부지에서의 방사능오염은 그 사건내용의 미미성에도 불구하고 원전안전관리에 대한 일반국민의 깊은 우려를 자아냈고, 어렵게 마련된 굴업도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부지는 활성단층의 발견으로 그 지정이 취소되어 기존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업추진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대북경수로지원과 관련한 국내업계의 마찰은 원자력산업계에 내재된 깊은 골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기도 하였다.

지난해 일련의 사건들과 관련하여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안전성 확보가 원자력사업의 대전제이며 최고의 정책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는 전력공급을 주목적으로 하지만, 원자력사고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안전은 그 어느 경우에도 사업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에 우선한다고 본다.

이는 국가에 있어 국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안보정책이 경제 · 사회 · 문화의 모든 정책에 우선한다는 개념과도 같다.

따라서 원자력사업자들도 사업태도를 일신하여, 주어진 규정과 규제요건의 수동적 · 소극적 준수에서 벗어나, 이제는 안전문화를 토대로 안전관련 규정을 자발적 · 능동적으로 지켜나가는 적극적인 자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즉 원자력 관계기관내 최고 관리층으로부터 일선 실무자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고와 행동에 있어 안전최우선의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점은 안전성 확보가 원자력사업의 대전제이며 최고의 정책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원자력발전소는 전력공급을 주목적으로 하지만 원자력사고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안전은 그 어느 경우에도 사업 본래의 목적이나 기능에 우선한다. 원자력사업자들도 이제는 안전문화를 토대로 안전관련 규정을 자발적 · 능동적으로 지켜나가는 적극적인 자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또한 이와 관련한 시설의 설치 · 운영기술과 안전관리 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통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올리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이 안전의 세계화 개념이라고 생각된다.

또 한가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점은 우리 원자력산업의 능력과 안전관리수준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은 나빠지는 역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최근 급격히 늘고 있는 국민의 환경에 관한 요구와 관계가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원자력사업 추진과정에서 적절한 홍보와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관계로 국민의 이해와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였던 것에 기인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최근 원자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려하여 볼 때, 앞으로의 원자력사업은 안전성에 대한 국민의 신뢰확보와 사업의 결정과정에서의 투명성,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용하는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효과적인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

그동안 우리 원자력계는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착실히 쌓아온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표준형 원전을 자력으로 설계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고, 이제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해외 원자력기술 수출과 대북경수로 기술지원도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지난해 초 출범한 WTO 체제를 바탕으로 한 무한경쟁시대가 시작되어 선진국들과 직접적인 경쟁을 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산업 전반에 걸친 개방화의 물결은 원자력산업분야의 경우에도 피해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되게 확보되어 있는 원전설계 · 기자재 제작 · 건설 · 시공 등 주요분야도 국내시장이 개방되어, 외국기업과의 경쟁에서 지면 자립된 우리 기술을 계속 유지 · 발전시키기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새해에는 우리나라 원자력정책의 중 · 장기적 방향을 제시할 「원자력진흥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수립을 계기로 세계화 · 개방화의 추세에 따라 원자력연구개발 · 원자력산업 · 원자력안전 · 방사성폐기물관리 · 핵연료주기분야에서 일신한 원자력정책을 수립 · 시행하고자 한다.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 부지확보 문제는 부지결정과정의 투명성과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부지확보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원자력 이용증대 등 원자력행정 수요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세계화 · 지방화에 부응하는 안전규제제도를 정비하고, 지방화에 부응하여 원전주변 환경감시, 공청회 활용 및 지자체 주도의 원전방재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세계화에 대비하여 원자력안전협약 · 방사성폐기물안전협약 · 비엔나협약 등을 수용하고, 안전규제의 전문화와 원자력안전을 최우선시하는 안전규제강화방안을 제시하는 안전규제업무를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